

[시국토론회]
세대와 젠더분열을 넘는
페미니스트 주권자행동 포럼
: 미투에서 대선까지

일 시: 2022. 02. 19(토) 14:00~18:00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실(온라인 줌)

공동주최: 한국여성학회·동아대젠더어펙트연구소·한국성폭력상담소

목 차

- **정치의 부재: 제로섬 논리를 벗어나자!!** 1
김은실(이화여대)
- **나 안 뽑으면 애 된다? - 협박 정치에 부처** 3
오빛나리(우롱센텐스)
- **이대남에서 정권 교체 담론까지, '민심'의 되먹힘과 정동정치** 7
권명아(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 **김지은(미투운동 당사자) 이야기** 15
정연실(미투운동 당사자) 이야기 26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야기 31
- **혐오에 더이상 권력을 쥐어주지 말라** 35
진냥(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반페미'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 어뷰징에 반응하는 정치가 혐오를 키운다** 40
조소담(닷페이스)
- **우리는 원한다. 여성 '있는' 민주주의** 45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정치의 부재: 제로섬 논리를 벗어나자!!

김은실(이화여대)

대선 국면에서 매일 언론을 통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사는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대남의 표심이 등장했고, 이들의 표심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주류 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적 역량을 확장시키는 정책이나 정치를 위해 페미니즘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2030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전략으로 선택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성에게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에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공공장 혹은 공론장 (public space)이 부재한 정치, 혹은 정치적 과정의 부재가 현재의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정치란 아렌트적 의미에서 평등과 비폭력의 원칙에 기반하여 함께 사는 방식이며, 공공 관심사에 대한 공개 토론과 공동의 숙고를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는 지금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대선주자들의 태도와 인식을 보면서 다르게 사고하는 리더십과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여성연대의 페미니스트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대남에 접근하는 제로섬게임의 퇴행적인 인식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이대남은 정치적 지지율과 관련되어 새롭게 구축된 정치적 범주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여성운동의 역사 그리고 여성의 시민권/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불공정의 이름으로 비판되는 이 지점을 역사적 정치적 지식과 지배/권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국면에서 20-30페미니스트들의 분노와 좌절, 무기력, 새로운 가능성과 연대를 위한 말하기의 사례를 언급한다.

지난 12월에 정준영 가수의 팬이었던 오세연 감독이 탈덕후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성덕'을 봤다.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성폭력과 반사회적인 범죄,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를 놀이로 실천하고 있는 자신들의 스타와 결별하는 것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었다. 20대 덕후였던 여성은 자신의 팬덤이 스타가 가해자가 되는데 협력을 하고, 그들의 반사회적인 행동을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문제있는 스타의 팬덤이 되는 것이 갖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괴로워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미투와 반성폭력이 일반적 지식이 되고 있는 새로운 세대는 자신의 행위와 감정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갈등과 힘듦을 견디어 내고 있다. 그들이 사랑하는 스타는, 정치인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드는데 나의 팬덤이, 나의 지지가 보탬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2022 2.12 여성주권자행동 시위에서 발언한 한국사이버폭력대응센터의 새길님은 6년간 여러 남초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고 했다. 남성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안티페미니즘은 놀이거리이고, 여성혐오와 모독이 유머로 소비되고 토론을 빙자해 페미니스트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되는 곳이 남성들의 온라인 공간이었다고 했다. 새길님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오랜 시간 고민했고, 고통스러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남성 문화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들을, 페미니스트들은 욕하고 조롱하고, 모독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 절망했다. 사람들은 세상은 나아지고 있고,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새길씨가 맞닥뜨린 현실은 더 퇴보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 안 뽑으면 애 된다? - 협박 정치에 부쳐

오빛나리(우롱센텐스)

안녕하세요. 오빛나리입니다. 2016년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반성폭력 운동에 연대한 <탈선>의 대표였고, 지금은 친구들과 <우롱센텐스>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문학 창작과 여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코미디도 하고, 투표도 하죠.

시국이 엉망이고 혼란스럽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아서 길게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다양한 업계는 물론,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성폭력 고발과 미투 운동이 있었던 지난 몇년간의 역사에도 반성폭력 의제와 페미니즘 담론은 서로가 속한 이익집단의 이해에 따라 다른 진영을 공격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이 사회에 주요한 가치로서 성숙하게 자리 잡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안티 페미니즘’이라는 구호가 강한 지지를 받기까지 합니다. 보통 안티가 많으면 팬도 많다고 하는데, 페미니즘 팬이 많다면 지금 같은 양당 체제가 안 나왔겠죠?

요즘엔 너나할것 없이 모두가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잘 들어보면, 페미니즘 얘기가 아닙니다. 액체 괴물처럼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만지작거리는 사람에 따라서 형태가 무한하게 달라집니다. 작가로서 한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되고 개인에게 풍부한 경험을 주어 성찰과 통찰을 갖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활동가로서 몇년동안 모두가 이 단어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 피로도를 느끼는 것에 비해 단순한 단어 이상으로 개념과 가치가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이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페미니즘’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기도 하고요.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요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16년에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고 <탈선> 활동을 할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기본적인 대 전제들이 사회에서 합의되지 못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말했던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1) 성폭력이 있고, 2) 성폭력을 저지른 개인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조한 환경이 있고, 3) 우리 사회는 재발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이 있다고 인지하기 이전에 성폭력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야 했어요. ‘동의’는 단순한 ‘응’과 ‘아니’로만 이루어지지 못하며, ‘폭력’ 또한 물리적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말을 포함해서요. 그 수많은 운동가들이 ‘폭력’의 정의를 범주화하고 지식과 체계를 대중화하는 동안, 여전히 성통념에 대해서는 사회가 멈춰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탈선>이 고발한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특출하게 나쁘고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사회 내부에 너무 만연한 왜곡된 성통념과 성폭력을 옹호하는 일반적이고 성차별적인 이해를 가진 ‘평범한’ 사람임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그것은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몰이해를 부추기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사건에는 모두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해결 절차와 수순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폭력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제대로 이해하여 예방 시스템을 사회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예컨대 성폭력은 개인 간의 일이고, 성차별은 현대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등, 갑자기 그동안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서 살아오며 학습했을 기본적인 사회적 이해를 무너뜨립니다. 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서 ‘여성 인권’이니 ‘페미니즘’이니 얘기 꺼낼 수도 없습니다. ‘페미니즘’의 ‘페미’만 나와도 사람들이 완전히 질려하거든요. 이상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담론 중 하나가 ‘공정’에 대한 가치라던데, 공정에 예민하다는 것은 이미 사회에 불공정한 조건과 차별이 많다는 자각 때문 아닙니까?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무도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없고, 그것 자체로 불안감을 갖게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보다 더 성차별에 예민한 감수성을 갖기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성차별은 없대요. 완전히 자유롭고 단일하고 독립적인 개인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

과, 개인이 선택을 내리고 결과를 감당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환경적이고 맥락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 권위적 요소가 개입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성폭력이 개인 간의 문제일 수 없고, 온 사회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에, 그리고 성폭력이 가능하게 했던 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성통념과 기울어진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에, 무조건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서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이라고 말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성폭력 가해를 고발한 피해자에게는 늘 뭔가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을 거라는 음해가 따라붙습니다. 여성의 말을 존중하거나 신뢰하지 않고, 나아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피해자의 과거 행적이나 앞뒤 상황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로서 역겨운 한편, 폭력 사건이란 단순한 그 행위의 ‘순간 포착’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폭력은 ‘순간 포착’이 아니라 구성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것을 소수자, 소외된 사람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근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페미니즘이거든요. 모두가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걸 부정할까요?

‘안티 페미니즘’이란 왜 중요한 가치일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요즘 청년층은 ‘안티 페미니즘’ 정서가 강하다고 하고, 그 정서를 정치인들이 널름 받아다가 아무런 아젠다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애초에 ‘실효성’을 따질 수 없는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는 이상한 것들을 ‘정책안’이라ப்ப시고 들이밀고 그 가치의 실현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선동하는데요. 정부 부서가 페이스북에 여섯 글자 써서 올린다고 없애고 말고의 근거가 되는 거라면 저도 여섯 글자 말할게요. 내가 대통령 할래. 일곱 글자네요. 적어도 제 말은 타당하기라도 하죠. 아무튼 그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표가 되고 말고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안티 페미니즘’이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당신에게 왜 중요하죠?

취업을 못 해서, 사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열등감을 건드려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받는 것 같아서, 연애를 못해서, 여자한테 무시받는 것 같아서, 남성성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여자가 목소리 내는 게 껄뻘해서, 유일하게 자아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 같아서, 약자를 괴롭히는 게 재밌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이유들로 추측을 해 봅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페미니즘 운동이 진짜 문제인 건지는 근거가 없어

보여요. 어떤 이유들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고 싶거나 일상에서 기분이 상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페미니즘이 없어진다면 그분들이 겪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고 기분이 정말로 좋아질까요?

우리는 인질 잡힌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안 뽑으면 애 된다? 나도 재도 다 문제지만 내가 더 여성 친화적인 퍼포먼스 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나 뽑아야 한다? 이 모양 이 판인데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바라는 건 한 명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나 미래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모든 대통령 후보가 페미니스트이길 바라고, 앞으로 마주할 모든 대통령들이 페미니즘 관점을 가지고 정치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시민들 또한 그렇게 정치하길 바라고요. 당연하죠. 페미니즘 관점이라는 것은 스위치 콘센트처럼 어떤 이슈에는 전원을 켜고 어떤 이슈에는 전원을 끄는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개념이 아니니까요.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대단히 상식적이어야만 하는 세계관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것에 타협할 여지는 일절 없습니다.

디스토피아가 도래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 시절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만 켜더라도 제일 인기가 많은 콘텐츠는 폭력, 종말, 상실에 대한 것이니, 모두가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망망대해 위 작은 판자 조각에 의지해 겨우 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헤엄치는 것이죠. 늘 그래왔듯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 정치 놀음에 놀아나지 않는, 인질 잡히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듯이, 우리의 공유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집권당이 어디가 되느냐와 상관 없이,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춘 페미니즘 공유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가장 강한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주권자 여러분, 하던 대로 합시다. 우리의 가치에 투표합시다.

이대남에서 정권 교체 담론까지, ‘민심’의 되먹임과 정동정치

권명아(동아대 젠더어펙트 연구소)

1. 신냉전 질서와 ‘젠더 갈등’ 프레임: 재벌 개혁이 이대남 담론이 된 경위

여성 진출이 크게 늘어난 공무원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고위직 여성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지 할당제로 해소하겠다는 발상은 사회주의적이다.(이준석, 인터뷰, 「공정한 남녀관계 요구하는 것이 여혐인가?」, 『한국경제』, 2021년 5월 8일)

“이준석에 의해 국민의힘 국시는 반공에서 반페미로 이동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선언을 ‘반페미’로 해석하며 강력 비판. 장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충실한 ‘이준석 아바타’로 분화했다”라고도 썼는데, 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후보를 조종한다는 주장인 셈. 장혜영 의원,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지금도 ‘펼치’와 ‘콩’을 사며 킬킬대는 식의 유치한 반공주의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시사인 편집국 「말말말」, 『시사인』, 749호, 2022년 1월 7일)

이대남 담론은 정당 정치 조직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글을 통해 논증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팩트 체크는 여기서는 가능한 줄이고자 한다. 현재 ‘이대남’은 반페미니스트로 대선의 캐스팅 보트라는 인식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대남’과 같이 특정 집단을 추정에 의해 추출한 속성으로 일반화하는 게 딱지 붙이기 방식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이는 편견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에 이 글에서는 인용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물론 이대남 담론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비판과 개입 또한 가능하다.¹⁾

1) 이대남 담론에 개입하고 비판하는 논의 지형도를 다각적으로 소개한 기사로는 다음을 참조. 김기훈 기자, 「구호뿐인 ‘여가부’ ‘이대남’ 논쟁…“발전적 대안 논의는 실종”」, 『연합뉴스』, 2022년 2월 10일자. 이 기사에서도 고용 구조 개편과 정치적 공론장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대남 담론은 반페미니즘을 선거 전략으로 적극 활용한 4·7 보궐 선거 이후 강화되어 현재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반페미니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양당이 구성하는 반페미니즘과 이대남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구성과 효과는 이질적이다. 보궐선거 직후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밈으로 활성화되었다.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에서 할당제가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 할당제만이 아니라 청년 할당제를 포함한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여성 할당제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면 청년 할당제는 누구에 대한 역차별일까? 청년 정치나 ‘역차별 당하는 이대남’을 자신이 대변한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가 기성 세대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해서 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청년 할당제가 사회주의적이라고 주장한 건 이준석 대표가 처음이 아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기조였다.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고용할당제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냄새를 풍긴다”라고 논평했다.(『머니투데이』, 2015년 12월 21일.) 재계는 2015년 이후 줄곧 청년고용할당제를 “반시장적”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이준석으로 이어지는 할당제 폐지론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 대기업의 고용 책임을 촉구하던 당대 ‘진보적’ 정책에 대한 안티테제로 구성되었다. 할당제 폐지론자들은 고용없는 성장 시대 고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또 고용 없는 성장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 세대의 고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적도 없다. 폐지론(할당제에서 여가부까지 폐지를 정책이라고 내놓는 주장을 폐지론이라 할 수 있다.)이 상징하듯 이들은 안티테제로 일관했고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대남, 페미니즘은 이런 대안 없는 안티테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소로 호출되었다.

한편 폐지론은 청년 세대를 위한 대안은 없지만, 기득권 수호를 위한 일관된 입장을 포기한 적이 없다. 할당제 폐지는 대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 시장 친화적 정책을 대중 선전용으로 다시 쓴 버전이다. 물론 여기서 규제 개혁이나 시장친화적 정책은 우파의 일반적 이념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현재 이른바 청년 실업 문제는 2014년 이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축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2014년 이후 ‘할당제’ 논란은 구체적으로 대기업 고용 구조 문제, 고용 없는 성장,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서) 청년고용할당제 정책 제안과 반발(백래시)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²⁾ 이런 맥락에서 현재 국민의 힘이 앞서서 선동하고 있는 반

페미니즘 백래시는 고용 구조 개혁(경제민주화)에 대한 백래시, 탈냉전에 대한 백래시와 중층적으로 결합되어있다. 또 페미니즘, 고용구조 개혁, 탈냉전 개혁에 대한 중층화된 백래시가 매년 얼굴을 바꾼다.

여성, 청년 할당제가 사회주의이고 갈등을 유발한다(세대에서 젠더까지)는 주장이 보여주듯 대기업 규제 개혁, ‘멸공’, 반페미니즘은 폐지론의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다. 규제 개혁과 반공은 냉전 한국 보수의 오래된 이념이기도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시대, 드높아진 재벌 개혁 요구에 대한 보수 집단의 반작용으로 재구성되었다. 또 고용 없는 성장 시대 건국 이래 최악의 고용 문제에 직면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역으로 활용한 전략이기도 하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만든 주인공인 보수 집단과 기득권 세력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인한 차별 시스템에 무한대로 내맡겨진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통일 대박’과 ‘규제 개혁’을 목소리 높여 외친 박근혜 정부는 급변하는 신냉전 질서 속에서 국제 관계의 주도권을 얻지 못했다. 규제 개혁 논리는 세월호 사건 앞에서 ‘이것이 국가인가’라는 길고 비통한 한탄 속에 침몰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족을 ‘세금 도둑’이라고 공격하며 이 사태에서 빠져나오는 듯했다. 해방 이래 처음으로 청년 우익이 길 위로 나선 사건이 세월호 유족을 공격하는 차별 선동 집회였음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보수 정치 집단과 청년 우익의 공조는 2014년을 정점으로 극적으로 강화된 차별선동의 산물이다. 2014년의 일베는 2021년 신남성연대로 얼굴을 바꾸었다.

멸공과 반페미니즘은 오늘날 기득권 보수 세력의 이념을 구성하는 분리 불가능한 이념소이다. 멸공이라는 냉전 반공주의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적을 생산하면서 갱신 중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혜영 의원이 “국민의 힘의 국시가 반공에서 반페미니즘으로 이동했다.”고 진단하는 근거가 없지 않다. 물론 반공과 반페미니즘을 단절적인 이행으로 보는 듯한 평가는 단선적이다. 냉전과 성평등, 사회주의와 페미니즘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분리될 수도 없거니와 한국 우파의 이념 내에서 이

2) 이와 관련해서는 권명아, 「불태워지는 건 여성만이 아니다」, 『백래시 대응 긴급토론회』, 젠더어펙트 연구소, 2021, 6월. 권명아, 「이준석이 82년생 김지영을 공격하는 이유:이대남 현상은 실재하는가 3」, 「인국공 사태의 교훈이 반페미니즘인가:이대남 현상은 실재하는가 4」, 『프레시안』, 2021년 5월 31/6월 3일자 참조.

들은 생각보다 더 밀착되어 있다. 그럼에도 “장혜영 의원, 죄송하지만 틀렸어요.”라는 『시사인』 편집국의 반응은 징후적이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른바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반응과도 무관하지 않다. 페미니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냉전 혹은 계급이 더 중요하다고 ‘훈계’하는 진보 진영 담론의 전형성 말이다. (물론 『시사인』의 페미니즘에 대한 논조는 이 코너로 대표될 수 없고 페미니즘에 초점을 맞춘 보도도 많다. 그런 점에서 이런 반응은 역시 징후적이다.)

그렇다면 이른바 진보 진영은 페미니즘보다 더 중요한 계급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탈냉전, 고용구조 개혁, 재벌 개혁, 경제 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같은 담론은 여당이 된 과거 ‘진보 진영’에게 사라졌다.³⁾ 여당에서 ‘이대남 문제’는 평창 동계 올림픽 공정성 논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에서 촉발되었다.⁴⁾ 탈냉전을 적폐 청산의 핵심 이념으로 삼았던 정권 초기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여당에게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종전 선언은 당장이라라도 이뤄질 것 같았으나 결국 실패했고, 이는 신냉전 질서가 견고해지는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일자리 정부’의 구호는 무색해졌고, 탈냉전도 못하고 신냉전 체제에서도 우위를 잡지 못한 채 청년 세대의 정부에 대한 불만은 날로 높아졌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고용 책임을 부여했던 문재인 정부의 고용 구조 개편 기조는 사라졌고 고용 문제는 청년 실업 문제가 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출마부터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을 표나게 내세웠고 지난 1월 12일 경총 방문에서도 재차 규제 개혁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티비 토론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재벌 개혁을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고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책 기조는 ‘재벌 개혁’이 아니라 ‘재벌 구조 개혁’이라고 여러번 강조하기도 했다.

3)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진영으로 규정하는 걸 비판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잘 드러나듯이 기존에 양당 체제를 진보와 보수로 구별하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386 세대 중심의 ‘진보진영’을 리버럴(자유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좌파 진영이나 진보 진영을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다. 여기서 ‘진보진영’이라고 기술하는 건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도 세월호, 촛불 시위, 탄핵, 보궐선거 국면을 지나면서 기존 여당이 ‘진보’의 이름과 정파를 점유하면서 만들어진 일련의 사태를 지칭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대응과 담론 구조의 주체를 ‘진보진영’이라고 기술한다. 특히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 전후로 성폭력 사건을 ‘진보진영’에 대한 위협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진보진영’이라는 정파와 주체가 작동하는 함의가 대표적이다.

4) 권명아 「K적인 것의 기원과 K차별 - 차별 대응 제도와 교육, 사회통념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80집,(2021)에서 상세하게 논하였다.

탈냉전, 경제 민주화, 불평등 해소와 같은 이른바 ‘진보’의 이념은 실패하거나 타협 과정에서 희미해졌고 대신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이라는 패러다임이 들어섰다. 이런 맥락에서 젠더 갈등 프레임은 이른바 진보 진영의 탈정치화의 산물이다. 나아가 이러한 탈정치화는 ‘민심’, 세대 등 특정한 집단의 문제로 전도되었고 ‘변화된 현실’ 혹은 ‘여론’ 등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정치적 이념과 주체가 사라지고 탈정치화된 이해관계 집단이 전면화되었다. 이 과정은 팬덤 정치의 확대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모두 팬덤 정치의 폐해로만 보는 건 단순한 해석이다.

사회 변화에 대한 가치 지향이 사라지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확행”이 정책 기조가 된 것은 징후적이다. 이대남 담론은 이른바 ‘진보 집단’을 자처하는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탈정치화를 ‘여론’으로 합리화하고 문제를 이대남에게로 돌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십 대 여성과 페미니스트는 ‘극단화된 존재’로 이대남은 반페미니스트로 표적화 되었고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린 오래된 진보 집단은 이런 문제 집단을 다스리는 주체로 재설정되었다.

2. 성폭력 부정주의의 되먹임 효과와 정권 교체라는 정동

최근 대선 여론 동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게 된 여권에서는 386 정치인 용퇴론이 잠시 제기되었으나 재빠르게 폐기되었다.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과 보궐선거 국면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무공천을 주장하던 논의는 ‘당심’의 이름으로 폐기되었다. 조국 사태에서 광역단체장 성폭력 사건, 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진보 진영’에 대해 제기된 비판은 과도한 윤리적 요구라는 이름으로 폐기되었다. 진보 정치에 도덕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건 정치를 모르는 아마추어들의 행태라는 논리가 정치 철학의 이름으로 행세를 했다. 피해자를 부정하고,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마침내 성폭력 자체도 부정하면서 진보 정치는 ‘윤리’나 ‘가치’를 폐기하고 ‘당심’, ‘국민의 심판’, ‘여론’을 자신의 근간으로 삼는 방향 전환을 진행했다. 나는 이를 성폭력 부정주의라 규정한 바 있다.⁵⁾

‘진보 진영’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기보다, 비판 세력의 신뢰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

5) 권명아, 「성폭력 부정주의의 정동적 힘과 대안적 정동 생성의 ‘쓰기」, 『여성문학연구』, 2021

체의 신뢰 자체를 집단적으로 부정하는 선동이 이어졌고 페미니즘은 여론의 이름으로 폐기되었다. 보궐선거에서 패배했어도 이런 방향성에 대한 반성은 없었고 기조도 철회되지 않았다. 페미니즘은 중요하지 않고 부동산이 패배의 관건이었다는 진단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페미니즘의 신뢰는 파괴되었으나 자신들은 전혀 리스크가 없으며 오히려 대중이 페미니즘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라는 판단들이 여전하다. 과연 그럴까.

진보 진영의 윤리성에 대한 비판이 드높았던 보궐선거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았다. 대선을 앞둔 현재 표면적으로 대선의 ‘핫이슈’는 윤리나 도덕성이 아니다. 페미니즘이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언급 자체가 회피되고 진보의 윤리는 ‘상대방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저울질로 회피된다. 대선의 관건은 ‘실용’이나 ‘경제’라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갑질 문제’가 대두되어도 경제 정책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 역시 강하다. 이른바 ‘대중의 여론’ 역시 윤리나 대안 요구, 정치적 주장과 같은 키워드로 갈무리되지 않고 개별 사태에 대한 반응으로 환원된다.

누구도 진보 진영에 대해 윤리나 도덕성을 논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몰두해 있거나 판데믹으로 살기 바쁠 뿐으로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몇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진보 진영에게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묻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변화이다. 이를 단지 정치 냉소나 환멸로 볼 수는 없다. XINE YAO는 백인의 느낌(feeling)이 중심이 된 미국 사회에서 무관심하기(unfeeling 혹은 disaffected)가 비백인, 특히 흑인 소수자들의 해방의 정치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논한 바 있다.⁶⁾ 반페미니즘 차별선동 담론이 증폭하면서 이른바 이십대 여성의 탈정치화를 조롱하는 논의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공격은 비판하기에도 저급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 담론장 전체를 살펴보아도 여성의 감정, 정서, 무감정, 느끼기와 느끼지 않기의 정치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한정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권 교체’ 담론의 급격한 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권교체 담론은 야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이 정치 공학을 위해 부리는 도구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선 역사상 후보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보다 정권 교체 여론 조사가 중요해진 건 처음이다. (정권 교체 논의가 처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내로남불에서 정권교체까지, 보궐선거에서 대선까지 짧은 시기 압축적으로 무언가가 변화했다. 바로 더는 사람들

6) *DISAFFECTED, THE CULTURAL POLITICS OF UNFEELING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XINE YAO, DUKE UNIVERSITY PRESS · DURHAM AND LONDON · 2021

이 진보 진영에게 윤리, 가치, 대안과 비전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궐선거 직전까지도 평범한 주권자들은 진보 진영에게는 적어도 윤리나 가치, 대안과 비전, 혹은 부끄러움과 염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보수 정당에 윤리나 가치를 기대하지 않게 된 게 세월호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것도 다시 새겨두자. 세월호, 탄핵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80%에 육박하던 높은 지지율을 다 잃어버리고 정권 교체 심판 앞에 놓인 것이야말로 진보 진영 스스로가 만들어온 방향 전환의 결과물이다.

피해자의 신뢰를 공격하고, 페미니즘의 신뢰를 공격하고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스스로에게서 윤리와 가치, 대안과 비전의 이름을 삭제해버렸다. 성폭력을 부정하고, 페미니즘을 부정하면서 '진영'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이 과정에서 모든 주권자는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건 더 이상 '진보의 가치'도 윤리나 염치도 아닌 정권뿐이라는 걸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은 폴리페서가 된 한 교수는 긴 세월 선거 때마다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편중에 균형추를 잡는 놀라운 주권자들이라고 평한 바 있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과 보궐선거 국면을 거치면서 주권자들은 '진보 진영'에게 소중한 건 정권뿐이라는 뼈아픈 자각을 하게 되었다. 그 소중한 걸 빼앗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리라는 것도, 소중한 정권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소중한 걸 빼앗아야지만 일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작은 소망들이 모여 정권 교체라는 여론으로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정권 획득을 위해 반페미니즘 전략을 적극 채용했고 이대남, 젠더 갈등, 극단적 페미니즘 등의 담론으로 주권자들을 탈정치화하도록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치 혐오에 굴복하기보다, 변화를 향한 염원을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수행 중이다. 정치권의 탈정치화에 맞선 주권자의 정치화가 정권교체 여론이라 하겠다. 정권 교체 여론은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나 야당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윤리와 가치, 대안과 비전을 폐기하고 이해관계에 몰두하는 탈정치화에 저항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위한 변화, 혹은 변화에 대한 요청을 주권의 이름으로 다짐하는 정치적 행동이 바로 지금 이곳의 정권 교체로 나타나는 주권자들의 집합적 마음이다.

3. 차별선동과 부정주의의 역사에서 걸어올리는 진실

설문조사가 모든 걸 대표해버리는 시대가 된 지 오래다. 인간 데이터를 독해하는 방법은 근대적인 엘리트주의와 식민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빅데이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수사로 데이터가 모든 걸 대표해버린다. 데이터가 되는 인간과 독해하는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넘을 수 없는 차별 시스템은 여론 조사의 이름으로 비가시화된다. 페미니즘을 비롯한 소수자 정치는 이렇게 인간을 수동적 데이터와 주체적 해석자로 차별화하는 근대 체제에 오래 저항해왔다. 해석의 특권을 차지한 인간들이 누군가를 데이터로 환원해서 배열하고 종합하고 예측할 권리는 어디서 비롯되었나? 소수자들의 삶은 그렇게 ‘대변’되어도 좋은가라는 비판이 근대 초기 이래 페미니즘 정치와 사상의 바탕이었다. 젠더 갈등이나 이대남 담론은 해석의 특권에 대한 소수자 정치의 비판과 역사를 삭제하고 다시 해석 주체의 자리를 공고하게 했다.

다가올 대선에서 누가 당선 되어도 반페미니즘 차별 선동이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차별선동이 전문적 지식이나 여론으로 정당화되어 더욱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 선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참조해 보면 차별 선동은 표적 집단이 된 사람들의 삶을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한다. 그런데 차별선동은 차별과 증오의 주체에 계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그건 동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뒤늦게 도착하기도 한다.

증오정치의 표적 집단이었던 프리모 레비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부정하고 짓밟는 ‘모욕주기’에 몰두하는 게 매우 역설적이지만 가해자들의 연루된 죄의식의 산물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프리모 레비,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 가해자의 죄지움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를 짓밟고 부정하고 모욕주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는 게 홀로코스트 부정주의를 만들었다는 게 프리모 레비의 분석이다. 피해자를 부정할수록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 부정하는 행위 자체가 죄지움의 증거라는 것, 프리모 레비가 길고 긴 부정주의 역사에서 걸어낸 진실이다. 페미니즘의 신뢰를 파괴하려는 차별선동과 피해자를 부정하는 집단적인 성폭력 부정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역사 속에서 걸어 올려보는 진실이다.

김지은(미투운동 당사자) 이야기 :

잊혀진 피해자의 시간들 - 안희정 사건 대법원 유죄 선고 이후

[들어가며]

2018년 3월 5일 미투 이후 단 한 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2019년 9월 9일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고 가해자는 감옥에 갔지만, 피해자는 간절히 원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는 아주 간절한 문장이 성립되지 않은 반분의 승리였다. 여전히 견고한 세상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도움 없이는 ‘온전한’ 일상 회복은 어려웠다. 개인이 가지는 한계에 부딪혀 멈춰서야만 했다.

성범죄가 법으로 명명백백 인정되고 감옥에 가면 사람들은 “잘 되었다.”, “이제 모두 잊고 잘 살아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적극적인 사과와 반성, 사회의 구조적인 도움 없이는 종결되지 않는다. 사법 판결이 내려졌으니 이후는 알아서 하라는 세상의 시선에 좌절할 겨를도 없이 심신을 추슬러 남은 현실에 맞서 싸운다.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까지가 진정한 싸움의 끝이다.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체하면서까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는 이유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더는 자신처럼 힘든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전한 일상을 그리며 치열하게 부딪혀 나간다. 누군가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적어도 법원 선고 이후 투쟁의 이 짧은 기록들이 조금은 더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유한다.

- 2019.09.09. 안희정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 2019.09.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해체. 법률지원 종료
한국성폭력상담소 사건 지원 지속
- 2020.03.05. <김지은입니다> 책 출간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1. 가해자와 가해자 소속 기관(충남도)에 대한 민사 소송

- 2019~2020. 민사에 대한 편견에 부딪힘. 한국 사회의 정서상 형사 사건으로 인정받으면 더 이상 민사를 하지 않았던 과거 사례가 많았음. 쉬운 싸움이 아니기에 많은 분들이 민사 진행을 만류하기도 함. 일상 회복과 올바른 선례를 남기기 위해 다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도움을 받아 새로운 변호사를 만남.
- 2020.07. 안희정, 충남도에 대한 민사 소장 접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2020.08. 피고 측(안희정, 충남도) 범죄 혐의 및 책임 부인, 2차 가해성 주장 지속 등
- 2021.02. 재판장 변경(오덕식 재판장 임명)
- 2021.06. 1차 변론기일 속행
- 2021.07. 개인정보 노출¹⁾
- 2021.07. 변론기일 기일변경
- 2021.09.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
- 2021.09. 2차 변론기일 속행. 추정기일
- 2021.09. 신체감정병원지정 및 감정인 ○○○에게 신체감정촉탁서 송달(1차)
- 2021.10. ○○대학교병원 감정촉탁서 반송 제출
- 2021.11. 신체감정병원지정 및 감정인 ○○○에게 신체감정촉탁서 송달(2차)
- 2021.12. ○○대학교 ○병원 감정촉탁서 반송 제출
- 2021.12. 신체감정병원지정 및 감정인 ○○○에게 신체감정촉탁서 송달(3차)
- 2021.12. ○○대학교 ○병원 감정촉탁서 반송 제출
- 2022.01. 신체감정병원지정 및 감정인 ○○○에게 신체감정촉탁서 송달(4차)
- 2022.01. ○○대학교 ○병원 감정촉탁서 반송 제출
- 2022.02. 재판장 변경(3번째 재판장 임명)

1)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 재판과 달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 피해자들은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고, 20대 국회에 이어(임기만료폐기) 21대 국회에서도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 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 성과는 없음.

[주요사항]

- ▶ 가해자와 가해자가 속해있던 조직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범죄의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일상 회복에 대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음. 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 소송은 여전히 피해자다움을 규정하는 사회적 편견에 부딪혀있고, 피고 측은 형사 재판으로 선고된 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주장과 함께 무리한 정보 요구를 함. 해당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신체 감정의 지연(4차례 병원 지정) 등 재판 과정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

2. 안희정 측근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사건 고발 및 민·형사 소송

- 2018.03~05. 악플러 및 안희정 측근 3인 고발
- 2018.10.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2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이중 일반인 20여 명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 등 구형
- 2019.12. 안희정 측근 3인 기소처분 촉구 탄원
- 2020. 상반기 안희정 측근 3인 검찰 내 사건 계류
(2년여간 수사 지연, 담당 검사 3번 변경 등)
- 2020.06. 검찰 약식기소하여 법원 약식명령 : 전 수행비서 어○○ 유죄 인정
(벌금100만원)
- 2020.06. 어○○ 불복. 정식재판 청구
- 2020.10.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1심 유죄 선고(최초 검찰 구형보다 두배로 선고됨)
- 2020.10. 피고인 항소
- 2021.04. 피고인 항소 취하
- 2021.04.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유죄 최종 확정
- 2021.03. 어○○에 대한 민사 소장 접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2021.06. 피고 측 불법행위 인정
- 2021.07. 조정회부결정
- 2021.08. 피고 측 요청으로 조정기일 변경
- 2021.08. 조정기일

- 2021.0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2021.09. 중국 : 강제조정
- 2021.09. 어ㅇㅇ SNS에 공개 사과문 게재(2021.12.31.까지 사과문 공개 유지 조건)
“본인은 직장동료였던 김지은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김지은씨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 2021.09. 어ㅇㅇ은 이후 SNS 새 계정을 만들어 활동함.
- 2018.04. 안희정 측근 1인(당시 충남공천심의위원) 민주당 쟁터폭력 TF 고발
- 2019~2020. 반복·지속적인 2차 가해로 안희정 측근 및 팬카페 지지자들 추가 고발

3. 악성글 게시자 등 2차 가해자 형사 고발

- 2018~2020. 2차 가해 관련 시민 제보 접수
- 2019~2020. 강의실에서 2차 가해성 발언한 교수(Γ대학교) 및 네이버(법률판), 필진 등 고발
- 2019~2020. 악성글 게시자 450여 건 1차 고발
- 2019~2020. 악성글 게시자 50여 건 2차 고발
- 2019~2020. 악플글 게시자 40여 건 3차 고발
- 2019~2020. 포털에 수사 협조 요청(국내 기업은 협조적, 외국기업은 비협조적)
- 2019~2021. 악플러 소환 및 수사를 통해 검찰 기소. 재판 및 약식 벌금 등의 유죄 선고 다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 2018.04. 기자단특방 사건 시민 제보 접수
- 2019.09. 언론인 관계자 등 12명 검찰 송치
- 2019.11. 방송사 성우 고발 → 모욕죄 등으로 입건
- 2020.02. 피의자 Γㅇㅇ 사과(반성문)
- 2020.03. 피의자 Γㅇㅇ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기자단특방 사건 가해자 대부분 기소유예 및 무혐의 처분. 일부만 약식명령.

[주요사항]

- ▶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악플은 심각한 범죄임. 그러나 수사 기관은 초범이거나 잘 몰랐다는 변명,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이유, 단순 행위,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죄질을 가볍게 여기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음. 악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사 기관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태도가 필요함.
- ▶ 악플러 고발과 일부 악플러 처벌에도 집단 공격처럼 순식간에 수천 개 악플들이 달림. 댓글이 공론장으로서의 역할보다 범죄 사실을 의심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주요 장소로 전락. 포털과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연예·스포츠 기사와 성범죄 기사(한겨레)에 댓글 비활성화를 하였듯이 성범죄 관련 기사나 또는 사건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 대해서만이라도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관련인이 사건 외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 필요.
- ▶ 불특정 다수의 악플을 직접 읽고, 고발하고, 삭제 요청 해야 하는 것 또한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되고 있음. 오히려 이를 방치한 포털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 포털의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 요구됨.

4. 포털 및 SNS 2차 가해성 글 신고 및 삭제 요청 접수

- 2020~2021. 인권침해 및 초상권 불법 게시글에 대해 신고
: 네이버/다음 290여 건 신고하여 260여 건 임시차단조치, 검색어 110여 건 신고하여 80여 건 삭제(1건당 연관검색어 3~5개로 300여 개 삭제)
- 2021.01~02. 일부 반려된 글에 대한 불법사유 보완하여 삭제 재신청
- 2021.01~02. 2차 가해글 게시자 이의신청으로 일부 글 복원
- 2021.01. 다음 복원건 재삭제 요청
- 2021.01. 다음 반려 : 해당 콘텐츠가 2차 가해라는 결정문 요청
- 2021.01. 네이버 반려된 명예훼손글 보완접수 : 5차 삭제 요청
- 2021.01. 네이버 복원건 재삭제 요청
- 2021.01. 네이버 반려 : 해당 콘텐츠 복원이후 성폭력위반 사유로 재신청 요청
- 2021.02. 네이버 복원건 성폭력위반 사유로 재삭제 요청(3차)

- 2021.02. 네이버 관련 글 삭제
- 2020~2021. 트위터 300여 건 신고하여 10여 건의 계정 조치 답변 받음. (학대행위 등 트위터 운영원칙 위반)

[주요사항]

- ▶ 포털은 삭제 신청이 반려되거나 복원될 시 해당 사유에 대해 문의할 별도의 창구를 찾을 수 없어서 원활한 소통이 불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 일관. 플랫폼 관리자로서의 낮은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피해자 인권보다 이익 창출 또는 파워블로거 등의 정보 노출을 더 중시하는 느낌 받음. 지난해 1월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오를 드러내는 악담과 저주가 난무하고,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
- ▶ 트위터는 신고 이후 실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되지 않음. 일부 트위터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반복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악성 글 게재시 동일 아이피를 임시 차단하거나 재가입 제한 등을 통해 일정한 제재가 있어야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차 가해는 국가기관의 삭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들을 직접 찾아 고발 해야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겨움. 포털 사업자의 적극적 노력 필요
- ▶ 온라인에 수없이 많은 2차 가해 자료가 게시되어 있음.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아서 블로그, 카페, 동영상 등 삭제 요구를 하여도 온라인 사업자는 범죄의 2차 피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느낌. 개인 권리 침해 등 삭제 절차를 통해 여러 서류와 설명을 통해 글을 지워도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원되기도 함. 2차 가해는 끝나지 않는 도 돌이킬수없게 느껴졌고 거대한 온라인 세상에 대응하는 개인의 한계를 느낌.
- ▶ 인터넷 준실명제보다는 온라인 사업자가 악성 글을 방치하거나 문제되는 글을 그대로 반복적 노출시 막대한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 필요하다고 생각. 최근 장혜영 의원도 '온라인폭력방지법' 제정에 대해 말하며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을 예로 제시함. 온라인 사업자에게 사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막중한 벌금과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임.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도 유사하여 온라인 폭력 게시물이 신고되면 신속히 처

리하게 하고 사업자들의 온라인 안전 의무 준수를 지원하면서 불응 시에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함. 국내·해외 기업 모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켜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이 마련되길 바램.

5. 산업재해 신청

- 2019.11. 산재 신청
- 2019.12. 도청의 비협조로 시간 지연. 도청이 제공한 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 확인
- 2019.12. 근무 관련 정보공개청구
- 2020.01. 정보공개청구 자료 회신 : 확인 결과, 도청이 처음 제공한 자료와 정보공개청구로 회신받은 자료에 차이가 있었음을 재확인
- 2020.01. 도청 경위조사서 미제출 등으로 심의 지연
- 2020.01. 추가로 오기재된 근무 정보 확인
- 2020.04. 산재 심의 회의 지연
- 2020.06. 산재 승인

[주요사항]

- ▶ 업무와 성폭력 사건의 연관성을 인정받고, ‘노동자’로서 인정받음.
- ▶ 충남도청은 피해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 선을 긋고 외면함. 조직이 방치한 불평등한 노동의 구조와 환경 속에 가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았음. 권력형 성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문제, 노동 환경에 의해 비롯되는 문제임. 조직에 분란을 일으키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산재 인정에 어려움을 겪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산재 신청을 어려워함.
- ▶ 노동 환경이 바뀔에 따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여성 노동자의 노동 현실을 반영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추가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사회적 보호장치 마련되어야 함.

6. 언론사 권리(초상권) 침해 삭제 요청

- 2021.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개인의 한계 존재,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상의하고 도움 요청
- 2021.02~06. 공무수행 중 촬영된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배포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삭제 요청 공문 발송
- 2021.02~06. 25건 기사 중 16건 삭제조치, 블로그 10건 삭제조치

[주요사항]

- ▶ 포털 삭제를 통해 언론사의 원기사가 삭제되지 않는다면 무한 유포되는 문제점이 있음. 포털에서도 기사 삭제는 기존 사건의 언론 분쟁과 관련한 직접적인 판결문 등을 요구함. 이는 피해자의 현실에서는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거대 언론사와의 재판은 또 다시 긴 시간을 요함. 포털에서도 원 사건 판결을 기준으로 피해 당사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임.

7. 언론피해 대응

- 2018~2022. 오보 및 2차가해성 기사, 가짜뉴스 모니터링 및 정정 요청 등
- 2020.01.13. ◦언론사²⁾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 기간도래 각하
- 2020.01.13. ◡언론사³⁾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 기간도래 각하
- 2020.01.14. ◢언론사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 불륜 문구 삭제

2) 공무 중 수행하던 영상을 (범죄 당시) '오피스텔 CCTV 출입 모습'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해자 얼굴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서 자료화면 송출(2018.03.08.보도)

3) 상동의 사진 게재(2018.03.09.보도)

4) 피해자를 특정하며 '불륜'이라는 잘못된 내용 게재(2019.10.15.보도)

- 2020.01.14. <언론사>5)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 접수 직후 ‘불륜’ 단어를 ‘성폭력’으로 정정
- 2021.06.11. <언론사, >언론사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 한국성폭력상담소 통해 삭제 요청
- 2022.01.16. 김건희씨의 녹취록 사건 발생 : 미투 폼훼 및 피해자에 2차가해성 발언 → 한국성폭력상담소 통해 사과 요청 입장문 발표(1.17) →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사과 요구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과(2.3)

8. 피해자 연대 활동

- 2018~2022. 직장·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 및 친족성폭력 피해자 등과의 만남
 - 2020.03. n번방 사건 관련 인터뷰(A언론사)
 - 2020.05.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선생님 지지 발언문
 - 2020.05. 위력성폭력 오거돈 사건 관련 인터뷰(B언론사)
 - 2020.07. 위력성폭력 박원순 사건 관련 인터뷰(C언론사)
 - 2020.08.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전하는 메시지(D언론사)
 - 2020.10. 서울시장사건공동행동기자회견 지지 발언문
 - 2021.01. 독일에 계신 피해생존자분들께 전하는 메시지(E해외언론사)
 - 2021.04.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전하는 메시지(F언론사)
 - 2021.06. 위력성폭력 사건 재판 방청
 - 2021.10. 일본의 미투 생존자 온라인포럼 참여
- * 발언의 경우 대독, 인터뷰는 주로 서면 인터뷰 진행

5) 가해자가 ‘불륜을 저지렀다’는 잘못된 내용 게재(2019.12.31.보도)

[나오며]

하루도 멈추지 않았고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과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셨지만, 홀로 부딪히고, 홀로 싸워나가야 하는 시간들도 많았다.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또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다.

위력 성폭력은 개인 간의 일대일 싸움이 아니라 권력구조의 불평등에 맞서는 사회적 싸움이다. 그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용기와 연대'라는 구조로 대응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에서 조력자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들은 피해자와 함께 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이고, 범죄를 막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하지만 조직 내 권력자의 평가와 위계 구조에 따라 고용과 퇴사가 즉각 정해지는 정치권에서는 피해자를 도운 사람들은 역적으로 몰린다.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서 위증하고, 2차 가해에 앞장선 사람들은 영전하였다. 방조자와 조력자의 미래가 뒤바뀐 셈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2차 가해자들의 공직 진출을 막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에 안희정계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은 지금도 청와대와 지자체, 대선 캠프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일부 권력자들의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절절히 써 내려간 기록 한 줄이라고 생각한다. 토론회 발표문이 다져줄 견고한 세상 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고,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원한다.

피해자의 시간들(2018.3.5.~2022.2.19. 1448일)

[단위: 년/분기]

구분	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미투(고발)~ 대법원유죄판결																																	
형사재판	형사고발																																		
민사소송	소송준비																																		
	재판진행																																		
2차기해	가해지측근 형사고발																																		
	가해지측근 민사소송																																		
	악성 댓글러 고발																																		
신제	공인 고발(교수, 언론인 등)																																		
	언론사 인종위 고발 등																																		
	업무상재해 신청																																		
인권침해	온라인 불법게시물 신고																																		
권리침해	언론사 초상권침해 삭제																																		
언론대응	오보 정정 등																																		
연대활동	피해자 연대와 지지																																		

정연실(미투운동 당사자) 이야기 :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실입니다. 저는 2017년 민주당 경선 당시 안희정의 지지자였고, 같은 해 9월부터 충남도청에서 안희정의 영상 촬영 담당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8년 3월 5일, 안희정이 고발당한 뒤에는 생존자인 김지은 씨 곁에서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미투운동의 당사자입니다.

이 공간에 오니 제가 안희정을 열렬히 쫓아다니는 지지자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17년 1월 26일, 안희정 캠프는 바로 이 공간에서 당시 지지율 하락세를 겪던 안희정의 기를 살려주자는 의미의 지지자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팬, 덕후를 자처하며 미친듯이 안희정을 지지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계’를 탄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 대선후보가 저와 친구들을 쳐다보며 감사 인사를 했다는 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희망의 신기루에 취해 행복을 느꼈던 기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느꼈던 희망의 신기루는 고발 이후 4년간 죄책감이라는 화살이 되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경선 당시 저처럼 팬도 덕후도 아니었던 생존자 김지은 씨가 고발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사생팬’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가장 크고 아픈 화살촉이었습니다. 안희정이 범행 전 “내가 그렇게 잘생겼니”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김지은입니다>에서 읽었을 때도 저는 한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팬을 자처할 당시 우스개소리로 ‘잘생겼다’는 말을 끊임없이 외친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거철에 지지하는 후보를, 소위 말해 ‘띄워주기’ 위해 한 말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를 때 써먹었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

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발 이후 수많은 오해를 사는 언니 앞에 나서서 수없이 쏟아지는 화살을 직접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저 또한 언니가 당하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꾸만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희정은 회식자리에서 언제나 저를 옆에 앉혔습니다. 가끔 장난스레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 때는 마이크를 차는 대신 저에게 마이크를 들고 바로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저 모든 순간에 대해 싫다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은 지은언니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에 언제나 '조력자'라는 위치에 머무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겨우 할 수 있었던 건 1심 재판에서 가해자 측에 섰던 압도적인 숫자의 공개 증인에 대항하여 단 한 명의 친구와 함께 공개로 증언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같은 여자로서', '네가 의리가 있어서' 같은 말로 제 행동을 대신 합리화해줄 때도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력자라는 틀을 깨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박원순이 성폭력으로 고발을 당하고 자살한 이후부터였습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은, 안희정이 유죄를 받았으니 이제 네 인생 살으라는 주변인들의 말에 따라 타지에서 인생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박원순은 제가 세 번이나 표를 던져 권력을 쥐어 준 3선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제가 큰 고민 없이 유권자로서 쥐어 준 권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고통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저를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안희정이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을 때에도 박원순은 끊임없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생존자 김잔디 님의 고발은 이것이 끝나지 않는 싸움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몇 명의 정치인 뿐만 아니라,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권력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희정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이유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저는 나설 필요가 없다고도 합니다. 남은 트라우마를 치

료하고 다 잊고 살아가면 된다고 합니다. 생존자와 거리를 두고 정치 쪽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말에 단호하게 당신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려 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이해하지만, 이 사건은 제가 외면해야 할 지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제가 당한 일이고, 유권자인 제가 쥐어준 권력을 권력자가 멋대로 휘두름으로써 그 누군가가 당한 일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저와 같이 희망의 신기루에 취해 있었던 안희정의 주변 인물들은 여전히 그 신기루를 버리지 못하고 공개적인 곳에서 생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공개 증언과 2차 가해 활동으로 생존자에게 낙인을 찍은 이들은 여전히 민주당 내 의원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청와대에서도까지 승승장구하며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성폭력 사건이 아닌 안희정의 몰락으로 여기며 이를 본인들에게 익숙한 서사인 정치 스캔들에 끼워넣으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진영논리와 계파 다툼이라는 맥락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틀린 접근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정치인 안희정을 몰락시킨 사건이 아닙니다. 무언가 뒷얘기가 있는 정치 암투극 또한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형사 사건입니다. 차마 앞으로 나서거나 고소를 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하는 날까지 생존자가 난도질되고 있는, 여전히 진행중인 길고 지난한 사건입니다. 안희정은 직위를 잃고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모친상에 대통령의 화환을 받을 정도로 권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이 스스로가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린 한 시민을 수년 간 끊임없이 괴롭혀 온 그런 사건입니다.

크고 작은 권력을 쥔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철썩같이 믿고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합니다. 안희정 사건을 겪은 건 김지은과 정연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이고 생존자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는 것은 저에게 너무

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쉽지도, 안타깝지도, 또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이 거대한 흐름의 당사자라는 걸 깨닫고 저의 언어를, 저의 목소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때 가졌던 거대한 희망이 도려내진 자리에 절망만 차오르는 듯한 기분으로 보낸 4년이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최초 고발자인 지은언니의 곁에 설 것입니다.

현재 정치권의 상당수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폭력 및 성차별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에 역사의 퇴행을 개탄하며 절망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소수의 권력자들보다도, 그들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는 수많은 노동자, 권력 남용의 피해자, 그리고 아직 나서지 못한 성폭력 생존자들이 아직도 숨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뒤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스로의 목소리를 찾고 힘겹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제 덕분에 용기를 낸다고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가진 작은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 이 거대한 여성멸시의 흐름에 편승하여 생존자의 용기있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롱한 정치권에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무시하지 못하면 조롱하여 찍어누를 수 있다고 믿는 목소리는 단지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주장대로 원래는 멀쩡한 사상인 페미니즘이 한국에서 뒤틀리고 오염된 것 또한 아닙니다. 이 흐름은 당신들의 짧고 알량한 권력보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이 없다면, 아니 혹시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언정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나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생존자 여러분, 특히 모든 여성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우리가 겪고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같은 처지에 있는 서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송구스럽게도 우리의 생존과 발언은 당장의 문제 해결과 통쾌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함입니다. 비록 너무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부디 함께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야기 :

2018 미투운동, 4년 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가해자 출소를 마주하는 '우리의' 시간

1. 지난 4년, 피해자 비난과 책임전가가 여성 전체에 대한 비난, 책임전가로 확대되다

미투운동은 말하기부터 피해자를 향한 비난, 책임전가, 음모론과 싸우는 과정이었다. 가해자의 권력, 권세, 명예, 지지세력이 크면 클수록 그 규모가 컸다. 김효영(2019)¹⁾은 안희정 성폭력에서 (가해자 측의 대응이) 위계적 권력 구조의 문제를 탈각시키고,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힘센 담론 - 즉 꽃뱀 '순수한 피해자' 담론을 끌어와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들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하는 가해자-피해자의 개인 문제로 재탄생시켰다고 분석한다. 많은 이들이 <피해자를 향한 검증>을 퍼 나르고, 이를 알 권리와 시민들의 합리적 질문과 참여로 정당화했다.

성폭력 법적 기준은 68년전 형법 제정 당시부터 피해자의 저항 정도와 피해자다움을 입증케하는 체제였다. 미투운동 후 '최협의 폭행협박에서 동의 유무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이 이어진 이유다.²⁾ 안희정 사건은 "성인간 위력에 의한 간음은 일반 성폭력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오거돈 사건은 "기습 추행이 강제추행 인정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으로, 박원순 사건은 "성폭력의 증거를 내 놓으라"는 종용으로 법 제도상 도달한 현재 사회적 수준을 부정, 역행, 퇴행했다.

안희정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륜 가해자라고 선동했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이에 합류했다. 오거돈 사건이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한 김두관 의원은 징계 요

-
- 1) 김효영(2019) '미투운동에서 '객관적 진실'의 딜레마 : 안희정 사건 관련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문화연구전공 석사학위 논문
 - 2) 미투운동과 형법상 강간죄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투가 있다/있다 -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 이미경, 장다혜, 정대현, 김선희, 김보화, 김수아, 추지현(지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기획),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참고

구를 일컬어 “일부 극렬페미니스트의 주장”이라고 겨냥했다. 서울시 전 책임자들은 피해자의 업무 시 사진이나 영상을 외부로 유출, 유포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피해자 지원단체나 변호사를 타겟팅하여 총 공격을 했다. 피해자 비난이 변호사, 조력자, 여성단체, ‘일부 극렬 페미니스트’ 비난으로 퍼졌다.

현재 소위 ‘이대남 담론’은 남성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오래된 담론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을 총체화하여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묻는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역차별론과는 다르게 지난 미투운동이 방치해온 피해자 비난 기제를 여성 전반으로 확대한 측면이 존재한다.

2. ‘사회적 재해’에 대해 응답하기 : 개인에서 공동체로, 형사처벌에서 사회적 대응시스템으로

미투운동은 성폭력, 직장내 성희롱 등 ‘법제화’를 적극 활용하는 고발, 고소, 법적 대응 사안들이기도 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가해자-피고소인들의 대응 전략과 법 체계의 지형, 퇴행적 사회담론을 지나며 법적 처벌 과정은 피해자 개인이 통제되지 않는 역공격에 놓이는, 피해자 배제와 고립 작전이 단계마다 배치된 시장화된 전쟁터이기도 했다. ‘위력 성폭력 법정형량 높이기’가 책임감 있는 응답으로 결코 미더울 수 없었던 이유다. 아무런 비용도, 노력도, 논의도, 준비도 없이 법정형만 높이면 그것은 더 높은 장벽의 피해자 의심과 입증책임으로, 더 높은 가격의 가해자 법률조력 시장의 형성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가해를 방지, 승인한 원인과 구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성취한 원인 분석도 부족하다. 함께 기억하는 2차 피해 예방과 대응의 모범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소문과 가짜뉴스, 비난만이 무한 생산됐고, 그것은 복구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그것을 목도해 온 모든 시민들에 대한 가해다. 제도와 정책적으로 가장 치외법권에 있는 ‘정치권’ 업계가 빚어낸 상태다.

미투운동에서 드러난 사건들의 영역별 조직적 2차 피해, 가해자와 그를 조력하는 업계의 카르텔, 노동-교육/학습권-주거권 등의 삶의 기본권 침해 등을 살피면 권력을 이용한,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가로막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재난, 재해로 바라보아야 마땅하다.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이 이어지고

있는 듯이 말이다.

미투운동이 보낸 4년 사이에, 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피해자, 희생자와, 조력자, 시민들이 함께 싸운 결과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상조사/분석, 가해자 처벌, 책임자 사과, 보상/배상, 구조적 재발방지 이행 시스템이 전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친고죄 폐지 이후에도 개인이 입증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 하면서, 2차 피해를 헤치고 나서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형사법적 처벌을 가해자 개인에게 겨우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복성 역고소에도 시달리며 오랜 시간 소송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해로 인정되고 공동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3. 여성으로, 다중 정체성으로, 소수자와 연대하는 시민으로 교차로에서 맞서기

그동안의 선거에서 여성은 단일한 큰 세력인 양 호명되기도 했다. 실 내용은 보수 여성단체협의회와 어떤 내용의 공약 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여성유권자’가 집단으로 상징되었고, 공약 구성을 위해 캠프들이 애쓰기도 했다. 그러나 미투운동, 정치권 내 위력 성폭력 사건을 겪으며 여성이 단일한 내부를 가진 총체화된 하나의 집단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사회 권력을 분배, 재생산하는 좁은 의미의 정치 소속/진영이 여성으로서 페미니스트로서 차별, 불평등, 배제와 억압, 착취에 맞섰던 저항의 진지보다 우선 적용이 되었고, 성폭력 공론화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제지되고, 평가되고, 비난되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피해자들은 젠더에 기반한 성차별을 고발하는 여성당사자이기도 했고, 비가시화된 감정수발노동과 공공기관의 제왕적 갑질을 고발하는 노동자이기도 했고, 다른 소수자 시민들과 연대하며 차별에 저항하는 연대자이기도 했다. 우리들은 단일한 피해자를 동일하게 지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났고,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으며, 자신을 확장하며 연대를 도모했다.

앞으로의 긴 터널을 지나는 시간에서도 우리는 여성으로, 다중 정체성을 서로 알고 배우는 이웃으로, 우리 안의 차이와 내 안의 소수성을 들여다보는 시민으로 교차로를 광장으로 넓혀가며 싸워갈 것이다. 김지은 작가의 말처럼 '용기와 연대'만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들의 시간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다.

혐오에 더이상 권력을 쥐어주지 말라

진냥(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대선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가 곧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기가 시작될 것이다.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지난 정부 집권기동안의 평가다. 이 글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기 동안 교육과 학교의 영역을, 어린이와 청소년의 현실을, 젠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미투와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전면화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탄핵집회로 탄생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잊은 듯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여성 혐오와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성으로서 비하하고 추행하는 것이 마치 정치적 액션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불특정 다수 수만명이 운집한 집회에 여성의 몸을 만지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선언'과 행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에 맞서 서울에서는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박하여행)>이, 대구에서는 <평등한 연대> 등 여러 실천단체들이 촛불집회 현장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여성혐오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탄생했다.

그 이듬해, 2018년 1월, 학교에서 교사로 인한 성폭력이 폭로되었다.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성폭력 공론화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내내 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년간의 정체를 깨고 제정이 시도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위하여, 동성애 혐오단체들에 맞서 도의회 앞에 천막을 지킨 것도 청소년들이었다. 현재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치고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청에서 연좌시위를 한 사람들도 청소년들이었다. 2020년, 교사로 인한 학교내 불법촬영 사건에서도 졸업생들은 물론, 현재의 재학생들도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청보다도 먼저 디지털성폭력 대응 전략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학교들에게 배포했다. 지금의 대선정국은 지난 정부 집권기 내내 외쳐진 이 목소리들에 응답하고 있는가?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적 효능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나, 여러 언론보도에서 촛불탄핵집회 참가자 중 10~15% 정도가 청소년이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실제로 시민이 역사를 바꾸어내는 과정을 목격한 청소년들은 직후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한국 사회의 정치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허용되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촛불은 함께 들었으나 새로운 정부를 함께 세울 순 없었던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청소년들에게 빛지는 것이었고,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적 효능감과 실천에 현실이 모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은 그 모순을 지적했고 30여년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만18세 선거권을 이루었다. 그리고 최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단서조항이 있지만, 만 16세로 정당 가입 가능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청소년은 정치를 ‘허락받지’ 못한 존재들이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무서운 침대’), 한편으로는 무시하고 깔보며(‘급식충’) 기성세대의 과거와 동일시되거나(‘라떼는 말이야’) 미래의 주인공(‘꿈나무’)로 여겨지는 어린이 청소년은 현재에서 계속 밀려난다. 근거 없이 진보적이기를 기대받고 강압적으로 보수적이기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프레이지(2002)의 지적처럼 학생은 “주변인도 아니고 사회의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기에 그들은 언제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역사 속에서 정치적 주체로서 청소년의 존재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왜 젠더의 영역은 예외인가

2022학년도 교육과정을 고민중인 한 고등학교 교사가 올해에는 기후생태 동아리를 해야겠다고, 예전에 성평등 관련 동아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건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물은 적이 있다. 학생들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토론하고 성평등에 대해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재미있고 좋았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후 찾아왔을 때, 페미니즘이 커리어에 있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취업까지 가지 않아도, 기후생태 관련 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적히면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지만 페미니즘 관련 활동은 도움이 되지 않기에 학생들을 생각

하면 동아리 주제를 젠더와 관련있게 잡지 않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자 증언이었다. 공동체의 구조나 평등을 고민하는 대신, '페미가 회사에 들어오면 미투를 일으키기 쉽다'는 식의 리스크로 페미니즘에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읽는 책 한 권 한 권이 모두 전자시스템에 기록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그 정보가 공유되는 한국의 반인권적인 교육체제의 문제이다. 학생사찰이라고도 비판받았던 학생에 대한 기록은 제도화되면서 가진 자에게는 부모의 권력을 자녀 세대에 효과적으로 전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페미니즘 백래시와 결합해서 '페미를 걸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인 백래시이자 자본주의의 백래시이다.

앞서 말했듯, 청소년들의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지고 있다. 실천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조금씩 더 확보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젠더영역은 어떠한가? 물론 이 역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의 등장과 활동은 눈부시고 역사상 가장 평등의식이 높은 10~20대 여성 세대의 등장은 감격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페미'와 '일베'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재, 페미다'라는 말 한 마디로 집단적 따돌림을 겪게되는 학교 상황에서, 입시와 취업의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혐오는 구조가 되고 있다.

혐오에 더이상 권력을 쥐어주지 말라

몇몇 교사들은 교육 공간 안에서 여성혐오는 점차 그 강도가 확연히 세지고 있는데 정작 여성 학생들은 그에 대해 무관심해 보인다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특별히 젠더 인식이 없더라도 자신을 향한 혐오의 강도가 세어지면 그에 대한 반동을 보일 수밖에 없을텐데 교사가 나서서 이런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다며 생각을 물어도 별 다른 반응이 없어서 답답하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혐오가 거세어지는 것에는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그에 대한 '반동'을 확장하는 것은 왜 이야기하지 않는지 답답해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과거 보다 노골적인 성차별과 폭력이 좀 더 빈번했을 때, 학생들은 그 순간 순간 저항하기 어려웠다. 성차별과 폭력은 '그래도 되는 일'이었고 가끔은 학생대표를 여학생에게는 맡길 수 없으니까 행하는 '옳고 당연한 일'이었다. 성차별과 성폭력은 인정되는 권력의 행위였다. 그리고 지금,

교육의 공간 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대선 정국에서 여성혐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혐오는 권력을 획득했다. 대신 ‘성’이 부각되지 않는 평등이 주장된다. 일은 똑같이 나누어 분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역량이며, 능력이 있다면 성, 장애, 인종, 계급 등 다른 상황 속에서도 능력이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역량을 갖추지 않고 혐오와 차별에 반박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패배자로 여겨진다.

이렇듯 혐오는, 원래 교육의 본질이 아니었으나 마치 교육의 역할처럼 보이는 능력주의를 통해 그 권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끊임없이 소환한다. 페미니즘 교육을 획책하는 지하조직이 존재하고 이 불법적 조직을 찾아내 어린이 청소년을 구원해야 한다는, 조작된 가짜 청원도 등장했다. 성교육은 청소년을 섹스 중독에 빠뜨리기 때문에 막아야 하고, 성평등은 동성애를 조장하기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혐오적 언행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늘 근거가 된다.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여성가족부 논쟁에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여성가족청소년부’였다. 정작 어린이 청소년의 목소리는 가시화되지 않고, 혐오에 권력을 쥐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소환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등이다

근래의 교육 공간, 특히 학교는 과거보다 더 진보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 진보의 방향에는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가 존재했거나 적어도 존재해야 한다고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지는 알 수 없다. 한국 교육사에서 현재는, 평등이 역차별로, 비폭력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반항’으로 여겨지는 최초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학생인권담론이 교육권의 사회화에 기여했으나, 여전히 학생인권은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하나의 쟁점으로만 인식되고 있다(유성상, 2020). 특히 학생인권은 교권과, 청소년 인권 및 아동 인권을 청소년범죄 등의 다른 쟁점들과 갈등적 구조로 비춰지면서 지지하기 부담스럽고 위험한 것이 되었다. 성평등 역시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스쿨미투 운동은 젠더감수성이 교육 공간에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모든 국민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는 국민청원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스쿨미투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는, 엄벌주의로 대응이 귀결되면서 스쿨미투 운동을 학교 구조의 위계, 폭력에 대한 폭로가 아닌 피-가해자 간의 관계로 축소시키고, ‘꽃뱀’이나 선동 혹은 ‘영악’하거나 ‘싸가지 없는’ ‘나쁜 애’가 아닌, ‘순수한 미투’만이 인정되었다는 점이였다(하영, 2021). ‘의도’나 ‘목적’이 있는 폭로라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로, 가해자가 안타까운 피해자로 순식간에 전복되었다. 피해자는 끊임없이 평가당하고 저울 위에서 가늠된다. 차별받는다.

그래서 미투를 넘어서기 위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은, 편가르지 말라는 요구다. 해방은 조건이 아닌 존재로서 인정될 때 가능하다. 록산 게이의 ‘나쁜 페미니스트’처럼 ‘나쁜 피해자’가 피해자로 인정될 때 모든 피해자는 피해자로 존중받을 수 있다. 훌륭한 모범적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싸가지 없고 저항적이며 못된 어린이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의 영역에서 울려 퍼질 수 있어야 한다. 공부 못하고 대학에 가지 않고 예뻐지려고 하지 않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요구한다.

더 이상 혐오에 권력을 쥐어주지 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등이다.

참고문헌

프레이지. (2002). 페다고지. 남경태 역. 서울: 그린비.

하영. (2021). 교권 그리고 담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20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토론 마당 ‘교권은 학생인권이 (불)편할까?’ 자료집.

‘반페미’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 어뷰징에 반응하는 정치가 혐오를 키운다

조소담(닷페이스)

2016년, 닷페이스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정치적 말하기를 기록해왔습니다. 우리가 기록한 시간은 이어 말하기의 역사였습니다. 강남역 출구를 뒤덮었던 포스트잇은 스킨미투를 공론화한 용화여고 창문에도 붙었습니다. 용기 내 뉴스데스크에 앉은 한 사람의 정치계 성폭력 고발은 또 다른 분야의 성폭력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국산 야동’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라고 고발하고, 해시태그를 이어받아 증언하고 청원을 서로 독려했습니다.

포스트잇, 해시태그, 청와대 청원, 국민동의 청원, 집회 시위, 발언이 이어지던 마이크 앞까지. 이 시대의 여성들은 충분히 정치적 주체로서 말하고, 행동해왔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지난 시간 어떻게 이렇게 애써왔나 싶을 정도로, 주체적으로 구체적인 현안들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말하기는 우리 사회에 닫혀있던 수많은 가능성을 열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에게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성들의 정치적 진보와 대비되는 퇴행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닷페이스에서 각 후보의 정책 검증 기사를 작성하며, ‘여성 관련 정책’을 어떤 카테고리 고리로 분류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윤석열 후보의 경우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며 내놓은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청년 정책일 수 있을까요? 이어 말해온 여성들의 주체적 목소리는 지워지고, 대선에선 ‘반페미’와 ‘이대남’이란 단어를 중심으로 한 알맹이 없는 이야기들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젠더 이슈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대선이란 말은 허무합니다.

온·오프라인이 구분되지 않는 네트워크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혐오와 갈등 문제를 이용하는 정치는 더 빠르게 우리 사회의 독이 됩니다. 정치에서 특정 집단을 향해 던지는 시그널은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을 중심으로 퍼지며

그 갈등 양상을 격화시킵니다. 네트워크 사회는 내집단인 ‘우리’와 ‘그들’을 극명하게 비교하며 집단 정체성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동기’로 혐오와 미움이 작동하며, 집단적 적대감은 더 적극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어떤 집단을 더 결속하게 만드는 핵심이 되며, 외집단에 대한 적극적 공격과 차별을 행하게 만듭니다. 정치적 목소리로 인정받고, 주목받는다라는 감정은 이런 활동을 더 크게 만듭니다.

정치인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페미라는 키워드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왔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을 가진 것이 특정한 정치적 정체성인 것처럼 증폭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대남 호명은 에펠타 코리아, 디씨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방문과 공식 글 게재라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웹코 ‘이재명 갤러리’에 방문해 ‘갤주 왔다’는 인증 글을 올렸고, ‘한번 함께 읽어 보시지요’라는 언급과 함께 ‘홍카단이 이재명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글을 공식 계정에 공유했다 삭제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을 멈춘다고 약속해 달라. 그러면 지지하겠다”, “페미니즘의 광기에 사로잡혀 관념적 정의만 읊어대는 대중정당”, “그래서 난 홍준표를 택했다. 그는 페미니즘을 깨부숴 달라는 요청에 유일하게 응답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선거캠프의 온라인 소통단장은 ‘경청’을 이유로 반페미가 정치의 살 길, 표와 교환할 무언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에 피드백 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모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갈라치기, 갈등 조장은 안 된다’며 여성 커뮤니티는 접근이 되지 않아 글을 올리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닷페이스 인터뷰가 [단독] 타이틀을 달고 기삿거리가 된 데에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닷페이스와 씨리얼 출연 논란은 사실 논란이 될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났습니다. 나는 ‘네 편’이란 시그널, 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집단에 대한 적극적 경청, 특정 집단의 요구에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액션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닷페이스 출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과정 자체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7일, 씨리얼 측의 이재명 후보 출연 공지가 나가자, 28일 오전 온라인 소통단장 김남국 씨가 “유튜브 씨리얼 출연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셨다. 우선 적극적으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 없이 일정 담당하시는 선배께 꼭 전달하겠다.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글을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이후 28일 오후 일

정이 취소되었습니다. CBS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와 소수자 이슈를 의제화 해온 채널”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취소의 이유는 내막을 알기 어렵습니다. 캠프의 공식 입장은 일정의 문제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타겟을 설정하고 캠프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문자, 라이브 댓글, 커뮤니티 글 게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반응에 잇따른 캠프의 피드백이 나온 맥락을 생각해봅니다. 이 후보는 반페미나 아니냐 하는 반응을 얻어내고자 한 과정이 공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씨리얼’과 ‘닷페이스’ 출연 자체가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후보,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닷페이스 출연 확정이 1월 7일 한국일보 단독 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제목은 이재명, ‘여성 인권’ 닷페이스 출연한다…반페미 논란 돌파. 매체 출연 자체가 페미와 반페미 사이 전선에 서는 일이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닷페이스’를 부르는 불분명한 이름들(페미 매체, 여성 커뮤니티, ‘닷스페이스’를 포함해서)의 중심에는 ‘페미’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는 라이브 방송, 게시판, 지지자와의 토크방 등을 통해 여러 창구로 남성 지지층의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주권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는 “제가 출연한 미디어에 대한 우려와 논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청년의 목소리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라도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을 듣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는 입장과 해명이 담겨있었습니다. 1월 7일 같은 날,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캠프에서 출연을 추천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후를 색출하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캠프 내 여성 정치인에게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일을 왜 했냐, 출연을 당신이 추진 했냐는 취지의 원색적인 비난과 공격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이슈가 ‘젠더 갈등’ 전선의 중심이 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작전 모의가 생겼습니다.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뷰징’이 힘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지, 그 머릿수 싸움이 여러 결이 중첩된 총체적 사실을 압도합니다. 권력을 경험하고 집단을 확인하는 한 방법입니다.

3천 명이 접속한 이재명 후보 영상 공개 라이브에서는 반페미라는 의제를 둘러싸고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 출연

결정을 옹호하고자 하는 쪽과, ‘페미’라는 패배 수를 놓았다며 조롱하는 이들로 나뉘어 슈퍼챗(유료 후원 메시지)로 서로 도배를 막고자 했습니다. 도배글 내용은 ‘복붙’한 듯 같았습니다. ‘짖’ ‘형수’ ‘꼴페미’ ‘ㅋㅋㅋ’ 같은 조롱 글을 수천 명이 동시에 썼습니다. 최고 접속자 수 3천여 명. 경고 공지를 올려도 바로 문힐 정도로 많은 수가 조롱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동료 정치인의 성폭력을 옆에서 보며 느낀 것, 여성의 유리천장, 성평등한 노동 환경, 여성이자 성소수자인 당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대선에서의 ‘젠더 이슈’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페미 매체 출연’이라는 소동은 크게 어부지가 되었지만, 성평등에 대한 대선 후보를 향한 질문과 답변은 더 풍부하게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

여성 미디어, 페미 커뮤니티라고 부른 사람들을 보면서 닷페이스가 실천해온 페미니즘 저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는 매체로서, 지금까지 억압된 구조 때문에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 목소리 내는 힘을 돌려주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해지지 않은 현실을 함께 말하고, 더 평등해야 이 사회가 더 지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차별은 우리 사회의 한 곳을 썩게 만듭니다. 폭력이 돈을 벌게 하고, 침묵으로 사람이 죽고, 누군가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차별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주 여성의 차별을 이야기할 때도 결국 한국 성매매 산업이 만드는 차별의 맥락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동이 겪는 폭력을 이야기할 때도, 가정에서 양육자 여성과 아동이 함께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연결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군대 내 폭력을 이야기할 때도 여성 군인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이 계급 하위에 있는 남성에게 같은 양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일면을 떠나어 누군가는 그걸 ‘페미니즘 미디어’라고 부르더라고요. 페미니즘 저변의 의미는 거꾸로 그만큼이나 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남 이대녀 프레임의 협소함을 넘어섭니다.

저는 차별에 반대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길이라 믿습니다. 평등해야 지속 가능합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반대해야 수많은 가

능성이 우리 사회에 열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기와 듣기는 정치적 행위이고, 공론장을 만드려는 사람들은 말하고 들을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할 사람 만큼이나 들을 사람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듣는 정치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덧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말고 차라리 맘카페를 가라’, ‘거기는 페미인 이대녀들이 있는 데니까 딴 데 가라’. 그러나 사실 맘카페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든 있어요. 주권자이고, 차별에 반대하며, 여성을 향한 차별과 그와 연결되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에 감응하는 감각을 이미 가지게 된 사람들 말입니다.

정치적 주체로 각성하고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은 일시적 놀이로서 페미니즘에 열광하며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시위에 나가고,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왔다가 다시 또 행동의 장으로 나갔습니다. 일상을 회복했다가 또다시 분노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미투를 말했고, 여성의 죽음에 분노했고, 차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을 이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있고, 저는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있는 페미니스트를 믿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세상이 달라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은 단단하고, 언제든 실천적으로 소환될 수 있으며, 조롱과 모욕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더 평등해야 더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는 믿음 뒤에는 그렇지 않은 구조는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일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한다. 여성 ‘있는’ 민주주의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이토록 노골적인 남성연대 정치의 등장이라니

2022년 2월 7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우선순위로 공약한 것은 편가르기 의도 아닌가”라는 질문에 “중도·보수에선 여가부가 역사적 기능을 이미 다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젊은 사람들은 여성을 약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다. 남성이 약자일 수도, 여성이 약자일 수도 있다.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고 답했다. (윤석열 “내가 보복정치? 죄지은 민주당 사람들 생각일 뿐”, 한국일보, 2022/2/7)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터뷰지만, 이 인터뷰에서 놀라운 점은 성차별 부인주의 만이 아니다. 현재 지지율 1위, 유력 야당 후보 정도의 위치에서라면 중도확장성을 위해 보편에 호소하고 통합을 강조하기 마련인데, 자신을 세대와 성별을 나누어 한쪽 편을 대표하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윤 후보는 ‘편가르기’를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더 강력한 편가르기를 하면서 답을 한다. 편가르기를 통한 갈등 조장이 문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제도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은 중요한 징후다. 후보의 말은 후보가 대변하고자 하는 집단을 대신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윤 후보는 ‘60대 남자’의 입장에서 자신은 20대 남자를 대변한다는 걸 감추지 않는다. 이를 또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호칭이다. 2월 6일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은 윤석열 후보와의 인터뷰를 업로드했다. 제목은 ‘저는 꼰대가 아닙니다’ 이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석열이 형”이라는 호칭이 제일 좋다고 답했다. ‘석열이 형’은 윤 후보가 정치 초반부터 ‘미는’ 이미지였다. 유튜브 채널 ‘석열이형 TV’를 만들었고 최근에는 ‘석열이 형

네 밥집'도 열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하고만 '편하게' 소통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석열이 형'은 자신의 정치가 '형님-아우'로 묶여지는 조폭문화를 연상하게 하는 '남성연대'의 정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바로 이 '남성연대'의 정치에서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가 인식될 리 없으므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주장은 실수가 아니라 필연이었다.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여성주권자의 목소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여성유권자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남성연대의 정치가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유력 대선 후보에게 이토록 노골적인 여성배제를 외쳐도 관참을 거라는 (저쪽을 찍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안겨준 것일까.

주권자로서 여성 집단의 힘이 눈에 띄게 드러난 건 소위 '유모차 부대'와 '촛불소녀'로 알려진 2008년 촛불시위에서부터였다. 그 전의 광장에서도 여성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집단으로 표상되지 못했고 결국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1987년 민주화운동은 일부 운동권 대학생들이 주도한 '불온'시위라는 프레임을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바뀌는 순간이 아주 중요한 '승리'의 변곡점이었다고 평가된다. 이 순간은 그동안 사대문 안의 평범한 직장인들의 참여와 자가운전자들의 클랙션 소리로 기억되었고 2030 젊은 남성들의 옷차림인 '넥타이 부대'로 표상되었다. 물론 그 자리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나섰던 여성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다시 기억으로 소환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8년의 촛불시위에 나섰던 여성주권자들은 십대 여성이자 아이돌 팬클럽 멤버들이었고, 화장품 및 뷰티 정보를 공동구매하는 카페를 이용하는 2030 여성 소비자들이었다. 그 전에는 한번도 정치화된 집단으로 썬해지지 않았던 이들이 광장에 집단적으로 등장하자 보수정권에서는 이들 뒤에 배후세력이 있는지를 의심했고, 그동안 광장을 지켜왔던 것처럼 마이크를 쥐고 놓지 않은 팻캐스트의 선동가들은 자신들의 방송을 듣고 여성들이 정치화되었다고 자화자찬했다. 나는 이것이 첫 번째 파국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은 광장의 동료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팬클럽이라고 착각한 이들에게 진절머

리를 낸 삼국카페의 여성들은 “나는 진보의 치어리더가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그래도 2012년과 2017년의 선거에서 젊은 여성들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구호를 외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실제로 믿었으며, 그러한 보편적인 믿음은 2016~7년의 촛불에서 탄핵이라는 급진적 흐름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중요한 점은 여성으로서의 목소리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탄핵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성혐오적 발언이 나올 때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 같은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금지를 요청했다. (‘닭’과 ‘년’이 없이도 ‘박근혜 퇴진’ 집회 가능합니다. 노컷뉴스, 2016.11.12.) “민주주의는 여성혐오와 함께 갈 수 없다”(2016년 11월 7일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성명)는 선언이 이어졌고 ‘박근혜 하야를 만드는 여성주의자 행동(박하여행)’은 하야를 목표로 삼되 여자라서 대통령이 안된다는 식의 해석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표방했다. 촛불광장에서 벌어진 여성혐오에 반대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회자가 발언을 사과하고, 출연진이 바뀌는 등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성혐오는 안된다는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낸 과정이었다. 2008년 촛불시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권위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는 민주주의자의 모습을 통해 등장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17년의 촛불에서는 성차별과 여성혐오 역시 적폐라고 분명하게 선언되었던 것이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없다”)

2018년 이후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는 여성 주권자의 목소리

2016년은 서울메트로 성차별 채용비리와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해다.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가시화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탄핵 이후에도 성평등 민주주의를 외치며 광장에 있었다. 2018년에는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질러왔다는 것이 미투운동을 통해 밝혀졌다.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탄핵 당시 나왔던 “이게 나라냐”는 구호가 다시 소환되었다. 광장에서 사라진 건 가해자도 적폐도 아니었다는 깨달음이 이어졌다. 2021년 보궐선거는 ‘이대남’의 전향으로 화제가 되었으나, 이십 대 여성들은 기득권 양당 체제에서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다는 뚜렷한 의지를 15.1%의 회색

지대를 통해 보여줬다.

하지만 기득권 양당 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의견은 공론장에서 사라졌고, 양당 체제에 올라탄 집단에게는 집중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낙태죄 폐지부터 디지털 성폭력 문제 해결, 차별금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여성 시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동등해질 권리가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해나갈 권리로서 요구했음에도 여성들은 ‘정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될 수 없다고 취급되고 있다. 대체 그 정치는 무엇이며, 지금 누가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가. 여성이 제대로 대의되고 있지 않은 명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이 고안되어도 될까 말까 할 시점에, 야당에서는 남성연대를 내세워 여성을 버리고 가는 전략을 전면화했다. 그 사이 페미니즘은 공론장에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고, 퀴어들은 거대한 스크럼을 짠 혐오세력의 저주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서로를 반목하라고 부추기는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분노가 힘이 되려면 확산되고 응집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이 있어야 한다. 미투운동에 위드유로 응답했던 것처럼. 응답할 책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다. 하지만 백래시는 응답을 거부한다. 책임을 거부한다. 실체를 부정한다.

2022년 대선 정국에서 여성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한 건 ‘영부인’ 발 버리였다. “남편은 아무 것도 몰라, 내가 남자”라는 자신감을 보여준 여성은 왜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만들어진 공직자 부인은 공적 봉사를 요구받지만 아무런 권한도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무임 노동 자체를 배격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아무도 ‘여성’ 대선 후보의 남성 배우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보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지 않은가. 관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성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매우 낮다. 당연하게도, 여성들은 영부인이 아니라 주권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주권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행동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권자가 된다는 건 지배자의 특권을 부수기로 결심하는 일이고, 정치를 다시 재정의하는 일이다.

여성의 권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이야기한다. 성차별은 예전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반면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유엔개발계획(UNDP) 슬로건 페이지는 “미래는 여성”이라며 여성이 바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한다. 한국 근대 여성운동의 기원으로 일컬어지는 근우회는 1927년 “미래는 우리의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투 시대를 맞이해 여성단체들은 2018년 광장에 모여 “너

희들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가 너희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직 남성 지배라는 적폐는 부숴지지 않았으므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발에 걸려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응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원한다. 영부인이 아닌 여성 시민이 ‘있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주권자로서 말한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도 없다. 우리는 주권자로서 꿈꾼다. 우리를 위한 나라가 있기를. 우리는 주권자로서 행동할 것이다. 그것만은 우리의 권리로 남아있으니.